

당정, 25조 규모 추경 가닥... '취약계층·지방' 우선 지원

31일 국회 제출 뒤 내달 9일 처리
구직지원패키지 등 추경안에 포함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의원, 한 정책위의장, 한 원내대표, 박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뉴스1

당정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기조를 '취약계층·지방 우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또 오는 31일 구체적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약 25조 원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공급망 안정, 지방재정 보장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 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단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피해가 많은 많은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 우대 기준,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그 과정에서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을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세부 사항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보고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선별(지원의) 대상을 하위 몇퍼센트로 할 것인지와 금액의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취업 및 구직 지원 패키지, K뉴딜아카데미 신설,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창작·창업 활동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도 확대한다.

고유가 대응책으로는 석유비축물량 확대 및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및 나프타(납사)의 안정적인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경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재추진된다.

이소영 의원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배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는

데 여러 정치적 변화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며 "이번에 대폭 신규로(예산) 반영해 대도시 국민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에너지) 생산을 자립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이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 보증금 예산, 홈플러스 사태 등과 관련한 임금체불 조기 종료를 위한 체불임금 청산 지원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선제적 지원 확대도 논의에 포함됐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 위기 극복 및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기업 지원과 관련해 "자금 검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정책 금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며 "중동 전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위기 지역의 기업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DB손해보험과
안전, 건강, 사랑을

함께,
미약속
기적

나에게 맞는 간편건강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

팻들리 반려견·반려묘 보험



QR코드를 스캔해
상품을 확인하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71954호(2026.02.26~2027.02.25)

정청래 "민주당 필승카드"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촉구

김부겸 "30일 입장 발표할 것"
민주,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 "대구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요청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는 30일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을 갖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밖에 없다"며 "계속 삼고초려를 했고, 더는 시간상 미룰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이기도 했던 지역 구조 타파, 국민 통합을 위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꽃길을 마다하고 대구에 갔다"며 "그런 정신을 이번에도 심분 발휘해 주십사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또 "제가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립니다'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총리가 결단해 다시 한번 용기 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현재 대구 상황에 대해 "수십년간 국민의힘이 사실상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데, 16개 광역 단체 중 제일 잘산다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되고 정체된 도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 수

도, 수성 알파시티 등 대구 발전 구상을 거론하며 "그런 것을 하나하나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꿈이 있다. (김 전 총리가) 앞장서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대구에 또 한번 나가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 당대표로서도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총리가 결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국민 통합,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말씀에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당 안팎으로부터 대구시장 출마 권유를 오래도록 받아왔다. 하지만 출마 결심을 내리지 않았고, 정 대표가 이날 직접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주말 중 양해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다음 주 월요일(30일)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정 대표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 출마 일정에 맞춰 공천 준비를 미리 착수하는 모습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내일(27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할 것"이라며 "결단하시면 추가 공모에 응하실 것"이라고 했다.



metro

/서예진 기자